

2017년 도 제6차

금융통화위원회(정기) 의사록

한 국 은 행

1. 일 자 2017년 3월 23일(목)

2. 장 소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실

3. 출석위원 이 주 열 의 장(총재)
함 준 호 위 원
장 병 화 위 원(부총재)
이 일 형 위 원
조 동 철 위 원
고 승 범 위 원
신 인 석 위 원

4. 결석위원 없 음

5. 참 여 자	하 성 감 사	김 민 호 부총재보
	윤 면 식 부총재보	임 형 준 부총재보
	허 진 호 부총재보	전 승 철 부총재보
	채 선 병 외자운용원장	하 근 철 커뮤니케이션국장
	장 민 조사국장	신 호 순 금융안정국장
	박 종 석 통화정책국장	이 환 석 금융시장국장
	서 봉 국 국제국장	손 욱 경제연구원장
	장 정 석 금융통화위원회실장	이 승 현 공보관
	이 동 원 의사팀장	

6. 회의경과

가. 의결안건

<의안 제13호 - 2016년도 연차보고서(안)>

(1) 담당 부총재보가 「한국은행법」 제102조에 의거 매 회계연도 경과 후 3월 이내에 정부에 제출 및 공표하도록 되어 있는 2016년도 연차보고서(안)을 확정하고자 한다는 내용의 제안설명을 하였음.

(2) 위원 토의내용

제안설명에 이어 관련부서에서는 본 안건에 대해 3월 15일 위원협의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다음과 같이 보고하였음.

일부 위원은 통화신용정책 파트에 기술된 국책은행 자본확충펀드 관련 내용을 금융안정업무 파트로 옮기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다른 일부 위원은 경제동향 파트에 미국 경제의 상반기 둔화 및 하반기 회복 배경, 우리나라의 반도체 수출회복 이유 등에 대한 부연 설명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나타내었음.

또한, 일부 위원들은 경제일지 파트에 각종 법령개정 내용이 입법예고 기준으로 정리되어 있는데, 이를 시행일 기준으로 변경하고 금융통화위원회 의결사항은 본문에 상세히 기술되어 있으므로 제외하는 한편 일부 사진을 보완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관련부서에서는 이상과 같은 위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동 보고서를 수정·보완한 후 그 결과를 위원들에게 설명하였음.

(3) 심의결과

원안대로 가결

의결사항

2016년도 연차보고서(안)을 붙임과 같이 의결한다.

<붙임> 2016년도 연차보고서(안)(생략)

나. 보고안건

<보고 제18호 - 금융안정 상황점검>

(1) 금융안정국장이 보고 제18호 - 「금융안정 상황점검」에 대하여 보고하였음.(보고내용 : 별첨)

(2) 위원 토의내용

관련부서에서는 지난 3월 17일 위원협의회에서 논의된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요약 보고하였음.

일부 위원은 금번 보고서에서 부문별 리스크에 대한 점검이 잘 이루어졌으나, 시스템 리스크의 두 가지 핵심 요인으로서 시계열 차원의 경기순응성과 횡단면 차원의 금융기관 상호 연계성에 대한 점검·분석과 종합적인 평가를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는 한편, 지난 수년간 실물경기 둔화에 대응한 금융완화기조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미 연준의 금리인상 등으로 금융사이클이 긴축으로 전환될 경우 우리 금융시스템의 취약 부문이 어떠한 리스크에 직면할 것인지를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피력하였음.

이어서 동 위원은 가계 및 기업 신용사이클의 괴리가 점차 커지고 있는데 이것이 전체 금융시스템 리스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해서도 분석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이에 대해 관련부서에서는 GDP 대비 민간신용 갭이 크지 않은 가운데 가계 및 기업 신용사이클이 상반된 움직임을 보이면서 나타날 수 있는 리스크에 대해 계속 유의해 나가겠다고 답변하였음.

다른 일부 위원은 가계부채 분포 측면에서 고소득 및 고신용 차주 또는 가구의 부채점유 비중이 높다는 것만으로 가계부채 상황이 양호하다고 평가할 수 없다고 지적하면서, 다양한 기준에 의해 가계부채 누증의 리스크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이에 대해 관련부서에서는 가계부채의 리스크는 개별 차주 또는 가구의 소득수준이나 신용도는 물론, 금융 및 실물자산의 수준 등 다양한 미시적 데이터 분석을 통해 평가하여야 하며, 앞으로도 이에 대한 분석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답변하였음.

한편 일부 위원은 고정금리부 가계대출 비중의 확대가 가계부문의 금리상승 리스크는 축소시킨 반면 금융기관의 관련 리스크를 확대시킨 측면도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분석에 있어 양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제시하였음.

이에 대해 관련부서에서는 금융기관의 경우 주택금융공사의 적격대출을 취급하거나 고정금리대출로 인정되는 5년 주기의 변동금리 대출 등에 대해 만기가 비슷한 은행채 발행 등을 통해 금리변동 리스크를 헤지(hedge)하고 있다고 답변

하였음.

다음으로 일부 위원은 중소기업대출을 포함한 기업신용의 증가세가 빠르게 둔화되고 있는데, 이는 중장기적 시계에서 금융시스템의 안정을 저해시킬 수 있는 유인이 될 수 있는 만큼 관심을 갖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개진하였음.

다른 일부 위원은 2014년 하반기 이후 가계신용이 급증하였으나 주택가격은 상대적으로 덜 상승했는데 이는 인구고령화, 전세의 월세전환 등 주택시장의 구조적 변화에 기인하는 측면도 있는 만큼, 이러한 구조변화가 주택가격에 미친 영향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나타내었음.

한편 일부 위원은 최근 상호금융의 가계대출이 급증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취약한 차주를 중심으로 대출자산의 건전성이 악화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모니터링(monitoring)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을 밝혔음.

이에 대해 관련부서에서는 현 시점에서 상호금융의 전반적인 건전성 지표는 양호한 수준이나 관련 추이를 계속 지켜보겠다고 답변하였음.

다음으로 일부 위원은 자영업자 대출의 건전성 점검과 관련하여 통계상의 제약으로 자영업자의 가계대출 규모 추정시 개인사업자 대출을 보유한 차주를 자영업자로 식별하고 이들이 보유한 가계대출을 집계하였는데, 이 경우 개인사업자 대출 없이 가계대출만을 이용하는 자영업자 대출은 포함되지 않으므로 전체 자영업자의 대출 규모를 과소 추정할 가능성이 없는지 물었으며,

이에 대해 관련부서에서는 가계대출의 경우 대출받는 사람의 종사상 지위 또는 대출용도에 대한 미시정보가 현재 충분하지 못하여 차주가 자영업자인지 일반 가계인지 정확히 구분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설명하면서, 개인사업자로 등록한 자영업자의 사업자대출과 이들 차주가 보유한 가계대출의 합을 자영업자 대출로 볼 경우 관련 통계의 일관성 유지에 장점이 있다고 답변하였음.

다른 일부 위원은 일반은행의 위험가중자산 변화와 관련하여 은행들이 익스포저(exposure)를 확대하면서도 위험가중자산을 축소하는 것이 개별은행 차원에서 바람직하더라도 전체 금융시스템 차원에서는 리스크 확대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러한 현상이 미시감독 측면만을 강조하는 데에 기인한 것이라면 거시건전성 측면에서 관련 리스크의 완화 방안을 감독당국에 제안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한편 일부 위원은 은행들이 위험가중자산 축소에 초점을 두고 대출을 취급할 경우 기업에 대한 자금중개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덧붙였으며,

다른 일부 위원은 금융기관이 가계대출을 크게 확대하는 것은 위험가중자산 산정시 동 대출에 대한 신용위험을 저평가하는데 기인할 수 있으므로 금융기관이 적용하고 있는 가계대출에 대한 부도율이나 부도시 손실률 등에 대한 재점검도 필요하다는 견해를 피력하였음.

이에 대해 관련부서에서는 은행을 둘러싼 경영여건 변화가 위험가중자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관련 연구와 분석을 추가로 진행하겠다고 답변하였음.

마지막으로 일부 위원은 향후 금융안정 상황점검 보고서와 금융안정보고서 작성시 다룰 필요성이 있는 이슈로서 금리상승 등에 따른 부동산 연계대출의 부실 가능성, 글로벌 금융시장의 큰 폭 조정에 따른 거주자 해외증권 투자자금의 손실 가능성 그리고 이러한 요인들이 국내 금융시스템의 여러 부문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분석을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이와 같은 관련부서의 보고 후 본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은 다음과 같음.

일부 위원은 금번 보고서의 내용이 충실하고 시의적절한 분석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 금융안정 상황을 점검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으나, 금융안정 리스크를 평가하는 데 있어 금융사이클의 변화를 적시 파악하는 것이 핵심 과제인 만큼 이를 위해 민간신용 증가율 외에 여러 지표들을 활용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하면서 이와 관련하여 금융기관의 부채측면, 특히 GDP 대비 민간신용 갭보다 금융사이클의 움직임을 잘 반영하고 금융위기에 대한 예측력도 높은 것으로 나타난 시장성수신 등 비핵심부채의 변화를 면밀히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이어서 동 위원은 비핵심부채 측면에서 보면 지난해 국내 금융기관의 비핵심부채가 안정되는 모습을 보이고 특히, 외채의 증가규모도 크지 않은 점에 비추어 금융시스템의 위험은 제한적인 것으로 판단되나 가계 및 기업 신용이 부동산 부문에 쏠리면서 금융기관의 부동산 관련 익스포저가 확대되고 있어 향후 부동산 경기의 향방이 금융안정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만큼 주택가격의 변화가 금융부문

과 상호작용하여 부동산 관련 여신의 경기순응성을 확대시킬 가능성에 대비하는 한편 민간신용 사이클과 부동산가격 사이클을 결합하여 금융안정 상황을 평가해 볼 필요가 있다고 당부하였음. 아울러 국제금융시장의 완화적인 금융사이클이 국내 채권시장의 장기금리 하락을 통해 간접적으로 부동산 관련 여신 증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양자간의 연계성에 대해서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덧붙였다.

또한 동 위원은 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배경에는 가계의 소득증가가 제한적인 가운데 전세의 월세전환, 베이버부머의 은퇴 및 자영업 전환에 따른 가계대출 수요 증가 등 구조적 요인들도 작용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가계부채의 연착륙을 위해서는 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안정되어야 하는데 향후 추이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관련부서에 물었으며,

이에 대해 관련부서에서는 지난해 하반기 이후 정부, 감독당국이 가계부채 관리 노력을 강화하고 있어 향후 가계신용의 증가세가 둔화된다면 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의 상승속도도 다소 완화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답변하였음.

이에 동 위원은 가계부채 비율이 규제만으로 안정될 수 있는지, 경기순환이나 구조적 요인에 의한 영향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 심도 있는 분석이 필요하다고 당부하였음.

다른 일부 위원은 GDP대비 민간신용 갭이 금융사이클을 판단하는 중요한 지표이나 그 자체만으로 민간신용 확대의 적정성 여부를 평가하기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 후 우리나라의 민간신용이 빠르게 증가하는 원인으로 만기 일시상환 대출비중이 높아 차주의 원리금 상환 부담(DSR 비율)이 크지 않은 데다 보증과 연계된 신용규모가 상당하여 대출금리가 낮게 책정되는 가능성 등을 감안하면 우리경제의 금리변동 리스크가 작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음. 나아가 주택 시장에서는 분양 및 완공되는 주택 수가 점차 늘어나는데 반해 주택실질수요는 충분치 않을 수 있음을 우려하면서 앞으로 주택가격이 하락하면서 가계대출이 부실화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만큼 금융안정 상황을 면밀히 분석해 달라고 당부하였음.

이에 대해 관련부서에서는 차주의 원리금 상환 및 주택금융공사 등의 보증과 관련한 리스크를 면밀히 살펴볼 예정이며, 주택시장 상황에 대해서도 계속 예의주시하겠다고 답변하였음.

또 다른 일부 위원은 금번 보고서의 내용이 많은 도움이 되었으며, 향후에는 통화정책을 수행하고 미시감독당국보다는 거시경제에 대한 평가·분석 능력을 갖춘 중앙은행으로서 금융안정 상황점검시 금융시스템 리스크뿐만 아니라 금융상황 변화가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 거시경제와 관련한 분석에도 중점을 둘 필요가 있다고 당부하였음.

한편 일부 위원은 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과 관련하여 앞서 발언한 위원의 견해에 공감한다는 뜻을 밝히면서 동 비율의 증가 배경에는 부채, 소득, 주택금융 방식, 부동산임대시장의 구조 변화 등 다양한 요인이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의 중장기 전망과 안정적 관리 방안에 대해 심층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하였음.

이어서 동 위원은 제2금융권의 가계부채 증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분석을 강화하여 관계부처와 긴밀히 공유하는 한편, 제2금융권의 가계부채 현황을 적시 파악할 수 있도록 관련 통계를 보다 속보성 있게 편제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밝혔음.

또한 동 위원은 기업신용의 증가세가 빠르게 둔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재무건전성 지표가 개선된 것은 단기적인 현상이며, 이러한 추세가 지속될 경우 우리경제의 성장잠재력이 훼손되는 한편 통화신용정책의 파급경로도 제약될 수 있다고 언급하면서, 향후 기업에 대한 자금중개기능 약화 현상을 주목하여 불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개진하였음.

아울러 동 위원은 일반은행의 위험가중자산 변화와 금리상승시 비은행금융기관이 당면할 수 있는 주요 리스크에 대해 잘 분석해 주었다고 평가한 후 은행들이 리스크 관리 강화 이후 가계대출에 치중하고 담보·보증부대출 관행도 여전하다고 언급하면서 이러한 금융기관의 자산운용 행태는 금융시장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통화신용정책 수행에 있어서도 중요한 고려사항인 만큼 금융산업의 국제트렌드(trend) 등도 감안하여 이에 대한 분석을 보다 강화해 달라고 당부하였음.

일부 위원은 일차적으로 금융안정상황 점검회의의 의의를 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언급하면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통화정책과 금융안정간의 밀접한 관계가 중요하게 대두되었는데 전통적인 통화정책에서 산출갭(output gap)과 물가갭

등을 주요 지표로서 고려하는 것과 달리 금융안정 측면에서는 금융순환과 관련하여 유의해야 할 주요 지표를 찾는 문제가 숙제로 남아 있다는 의견과 함께 이러한 관점에서 금융안정상황 점검회의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나타내었음.

이어서 동 위원은 금융안정 상황을 심도 있게 점검하기 위해서는 우선 금융안정과 관련한 전통적 지표인 환율변동성, 자본유출입 등에 대한 분석과 함께 금융위기 이후 강조되고 있는 부채의 건전성을 경제주체별로 점검·평가하는 것이 중요한데 전통적인 시각으로 금융안정 리스크를 판단하고 위기를 포착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비핵심부채와 같이 새로운 지표 및 분석 방법을 찾는 노력이 중요하다는 의견을 밝혔음. 이러한 측면에서 향후 금융안정상황 점검회의는 동 사항들을 논의하는 회의가 되었으면 좋겠으며 금번 보고서와 관련해서도 현재 금융안정의 핵심 이슈가 가계부채이므로 가계부채가 증가하는 메커니즘(mechanism)을 더 세부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가계금융복지조사 외에 여타 미시 데이터를 활용·분석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하였음.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 과거 금융불안이 종금사, 투신사, 신용카드사 등 비은행금융부문에서 주로 초래되었고 최근에는 제2금융권의 가계대출 증가 우려가 있으나 아직 관련 정보인프라는 상대적으로 미흡하다고 지적하면서 비은행금융부문에 대한 정보를 신속히 파악하고 어떠한 일이 발생하고 있는지에 대한 분석을 강화해 달라고 당부하였음.

(3) 심의결과

설명 후 접수

(별첨)

「금융안정 상황점검」 관련 보고내용

지난해 12월 금융안정 상황점검(금융안정보고서 2016.12월) 이후에도 우리나라의 금융시스템은 대체로 안정된 모습을 유지한 것으로 평가됨.

시장금리가 상승세로 전환된 가운데 가계신용의 급증세 지속, 취약업종 대기업의 잠재리스크 상존 등으로 금융시스템의 리스크는 다소 증대.

이러한 리스크 증대에도 불구하고 우리 금융시스템의 복원력, 즉 대내외 충격을 감내할 수 있는 능력은 전반적으로 양호한 상태를 이어간 것으로 평가.

1. 부문별 금융안정 상황

가. 신용시장

2016.4/4분기 이후에도 가계신용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는 반면 기업신용 증가세는 크게 둔화.

비은행금융기관을 중심으로 가계신용이 빠르게 증가하고 취약계층의 부채 규모도 확대. 대출금리가 상승압력을 받으면서 취약가계의 채무상환부담이 커질 가능성.

기업신용 증가세 둔화로 부채비율이 하락하는 등 기업 재무건전성 지표가 개선되고 있으나 업황부진이 지속되는 가운데 대출금리가 상승함에 따라 기업의 채무상환능력이 저하될 가능성.

나. 자산시장

2016.4/4분기 이후 채권, 주식, 부동산 등 자산시장은 대체로 안정된 모습을 유지.

미 연준의 정책금리 인상 등으로 국내 장기시장금리가 상당폭 상승하였으나 회사채 시장은 연초 우량물을 중심으로 발행이 호조를 보이고 신용스프레드도 축소. 다만 향후 취약업종 대기업의 회사채 만기도래가 예정되어 있는 가운데 연준의 금리인상 속도가 예상보다 빨라질 경우 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

주가는 글로벌 주가 강세, 일부 기업의 실적 개선 등에 힘입어 상승 흐름을 지속.

주택시장에서는 대출금리 상승, 11.3 부동산 대책의 영향 등으로 거래량이 둔화되고 신규주택 청약경쟁률도 하락.

다. 금융기관

일반은행은 선제적인 리스크 관리 강화 등에 힘입어 2016.4/4분기에도 자산 건전성 개선 추세가 이어지고 수익성도 양호한 상태를 유지하였으나 특수은행은 부실여신 정리 과정에서 순손실이 확대.

비은행금융기관의 경우 경영지표가 전반적으로 개선 흐름을 보이고 있으나, 일부 증권·보험사는 시장금리 상승에 따라 관련 리스크가 증대될 가능성.

라. 자본유출입

외국인 증권투자자자금은 그동안 대내외 여건의 불확실성 증대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안정된 흐름을 보였으나 향후 미 연준의 금리인상 속도가 예상보다 빨라질 경우 유출입 변동성이 커질 수 있음. 다만 우리 경제의 양호한 대외건전성 등에 비추어 외국인 자금의 급격한 유출 가능성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임.

2. 금융시스템 복원력

가. 금융기관

은행 및 비은행금융기관의 복원력은 자본적정성 등 관련 지표가 규제기준을 크게 상회하는 등 양호한 수준을 유지.

다만 일부 특수은행의 경우 취약업종 대기업의 추가 부실 발생시 자본적정성이 저하될 가능성.

저금리 하에서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를 늘려온 일부 비은행금융기관도 시장금리 상승으로 관련 리스크가 현실화될 경우 복원력이 약화될 수 있음.

나. 대외지급능력

순대외채권과 외환보유액의 증가세가 지속되고 단기외채비중이 낮은 수준을 유지하는 등 외환부문의 복원력은 양호한 상태.

3. 금융안정지수

우리 금융시스템의 전반적인 안정상황을 나타내는 「금융안정지수」는 2016년 하반기 이후 주의단계(8)를 계속 하회. 다만, 가계부채 누증, 미국 新행정부 출범, 연준의 금리인상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 8월 이후 지수 수준은 점차 상승하는 모습